



53년 동안 군부독재가 계속된 미얀마의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제1야당 민족민주동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군부독재라고 했다. 2005년 군사정부가 장악하던 미얀마는 산악 정글지대로 돌연 수도이전을 시작했다. 당시 수도인 랑군에서 북쪽으로 320km 떨어진 산악지대로 이전했는데. 공무원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으니 명령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들은 반역죄로 기소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기까지 했다.

미얀마 군사정부가 1948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수도였던 랑군을 버린 까닭에 대해 2003년의 이라크 전쟁을 지켜본 미얀마 군사정부 지도자들이 다음은 “미얀마 차레”라고 지레 겁을 먹고 해안상륙 공격에 취약한 랑군 대신 다른 전략적 요충지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분석과, 당시 미얀마 군사정부 수반 등 군부 지도자들이 점술가의 예언에 따라 새 도시를 건설하곤 했던 버마왕의 행태를 흉내 냈다는 설도 있었다. 이렇게 미얀마 국민은 이런 무식하면서도 영똥한 군부 때문에 고충이 컸다.

하지만 미얀마인들은 낙담하지 않고 아웅산 수지 여사 등을 중심으로 씩 없는 투쟁을 벌여 이번 선거혁명을 이끌어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큰 고비는 넘겼으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군부가 권력 유지를 보장하는 장치를 곳곳에 마련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분간 반란을 꿈꾸지는 못할 것이다. 도도한 민주화의 이름을 역행하기엔 민중의 힘이 매우 거셀기 때문이다. 군부는 패배는 인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미얀마 민주화에 박수를 보낼 처지이기만 한 건가. 아니다. 지금은 없어진 통합진보당, 지금은 의원직을 잃은 김재연 의원이 몇 년 전 한국 업체가 국내에서는 못 쓰는 최루탄을 미얀마에 팔아온 사실을 들춰냈다. 당시 김재연 의원은 “최루탄 수출 주요국을 살펴보면 세계 주요 분쟁지역과 노동탄압국가, 인권탄압 국가에 집중되고 있어 ‘폭력진압 장비 수출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화운동을 벌이다가 미얀마 국민이 겪었을 최루탄 스트레스, 실은 메이드 인 코리아였던 것이다. 부끄럽다. 최루탄 팔아서. 또 미얀마와는 달리 유신 시대로 돌아가는 조국의 처지가.

### ■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석간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법안을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민 심판론을 언급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그것도 이른바 TK 물갈이론이 퍼지는 미묘한 시기에 지난 6월에 이어 또다시 심판론을 공개적으로 꺼내 든 것입니다.

○...“양당 정개특위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가 돌씩 만나서”

“밤을 새서라도 마무리 지어보자.”

이런 약속을 했었지만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여야는 10일 '4+4 회동'을 갖고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담판을 시도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NLD(민주주의민족동맹)가 승리해 정부를 구성하면 나는 대통령 위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라는 아웅산 수지 여사의 발언이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의 꽃’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제1야당 민족민주동맹이 지난 8일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했습니다. 80~90%의 득표를 한 것입니다. 이로써 역사적 정권 교체에 성공할 전망이다. 미얀마는 군부 독재자 네윈의 1962년 쿠데타 이후 53년 만에 민간의 손으로 정권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 ■ 김용민의 새책 많은 관심 바랍니다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이리) 관심 바랍니다.

- 예스24 <http://goo.gl/ndhoaj>
- 알라딘 <http://goo.gl/AkxzHD>
- 교보문고 <http://goo.gl/5KLODn>
- 인터파크 <http://goo.gl/tvdp7E>
- G마켓 <http://goo.gl/HDXKo1>

### ■ 제공

- 이담채김치 <http://edamche.com>
- 컴백홈대리운전 <http://goo.gl/SkTFno>
- 전창걸의 새싹땅콩차 <http://www.전창걸.com>
- 코골이119 <http://www.snore119.com>
- 차과장중고차 010-5556-6885
- 연지연곰탕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 문의] [kimyongminpd@gmail.com](mailto:kimyongminpd@gmail.com)

### [경향신문] 장외투쟁 53일·국회 태업 1년 반...이랬던 박 대통령

흔이 비정상적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니까 어제 “국민 삶과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 “정치적 쟁점과 유불리에 따라 모든 민생법안이 묶여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몰아붙였다. 10년 전, 이 말씀하신 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경향신문이 짚어봤다.

2005년 12월9일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자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초유의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무려 53일간의 사학법 장외투쟁의 시작이

었다. 한나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새해 예산안 처리와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입법 등이 지연되면서 '예산을 볼모로 정쟁을 벌인다'는 비판 여론이 있었지만 당시 박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박 대표는 "뺨을 때리고 발길질 하는데 우리가 맞아죽을 때까지 참아야 하느냐" 등 강경투쟁 의지를 수차례 밝히며 당내 일각의 국회 등원론을 잠재웠다. 여야는 이듬해 1월30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의 투쟁은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사학법을 재개정하지 않으면 다른 법안도 처리해 줄 수 없다는 연계 전술을 폈다. 이로 인해 2006년 4월과 6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 2007년 2월 임시국회 등이 모두 파행을 빚었다. 2007년 6월 여야가 사학법 재개정에 전격 합의하면서 공방은 막을 내렸다. 내가하면 민주주의, 남이하면 민생파탄이다.

## [동아일보] [사설] 'TK 물갈이'와 맞춘 박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 묘하다

동아일보 사설 한 대목이다. "총선에서 개혁적 인물을 공천함으로써 새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정치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장관이나 청와대 출신을 TK 지역에 꽂아 넣는 것을 개혁적 공천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대통령 임기 후반은 물론이고 퇴임 뒤를 보장해줄 친위 세력의 구축으로만 비칠 뿐이다.

어제 국무회의에는 8일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 놓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청와대에 이미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참석했다. 두 사람을 포함해 전체 국무위원 18명 중 7명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상태로 '빈껍데기 국무회의'라는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도 내각이나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대통령의 신임을 내세우며 총선에 출마한 사례는 종종 있었다. 하지만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장관들은 즉시 사퇴하고 후임자를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런 장관들을 앉혀 놓고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심판을 호소한다면 국정은 뒷전이고 총선에만 관심을 둔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경제 위기의 먹구름까지 몰려오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총선의 조기 과열에 불을 지퍼서야 공직사회의 영(令)이 서겠는가." 모처럼 동아일보가 한 자도 뺨 게 없는 사실을 실었다.

## [조선일보] 여의도나 박근혜냐... 총선서 선택하라는 메시지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의 한 참모의 말을 인용했는데. "오늘 국무회의를 앞두고 개별 사안에 대해선 큰 제목만 올렸는데 대통령이 거의 부처 실무자들이 만든 보고서처럼 발언 원고를 꼼꼼하게 보강했다"고 했다. 본인이 썼다는 건데. 이 와중에 '혼이 비정상적이다'라는 말이 나왔다. '혼이 나갔다' 또는 '혼이 난다'라는 말은 있어도, '혼이 비정상이다'라는 말은 없다. 비문 중에 비문이다.

## [중앙일보] 친박 의원 "박 대통령 용어사전에 진실의 반대말은 배신"

하여간 대통령 이 말에 새누리당은 내내 술렁였다. 한 고위 당직자는 대구·경북 물갈이를 말하며 "대통령이 '아무개를 찍어주세요'라고 하겠나. 그게 아니라도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할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간접 발언, 행사 참석, 측근 인사 활용 등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많다"고 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이 선택받게 해달라"는 발언이 그 한 예라는 것이다.

이 장면을 딱하게 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중앙일보에다가 "박 대통령은 정의와 불의, 도덕과 부도덕을 스스로 판단하려는 '규정자 의식'이 강하지만 신이 아닌 인간이 '진실된 사람'이란 가치를 규정할 순 없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향후 국회 내 친박 세력들이 최악의 경우 독자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 캐스팅보트를 쥐려는 시도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 [경향신문] "문상 온 사람, 청와대에 다 보고됐대요"

이 기사도 기막히다. 경향신문이 지난 사흘간 대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은 '설(說)'이 지배하는 곳이었다고 소개한 기사데. 그셋 밤 동료 의원들과 장례식장을 떠나던 새누리당 한 의원은 옆에 있던 다른 의원에게 "이거 우리 온 거 그러니까 빈소 방문한 것, 다 체크해서 청와대에 보고되는 것 아니야"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 의원은 "에이, 이미 저희 온 거 다 보고됐다는데요. 우리 온 것 비밀 아니에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자 말을 건넨 의원은 "너 겁먹었냐"라며 농담을 하기도 했다.

## [세계일보] 텃밭 물려가는 '찰의 사람들'... 새누리 갈등 고조

앞서 말씀드렸지? 그만둘 사람 즉 출마설이 나오는 사람을 국무회의에 불러다놓고 "진실한 사람 뽑아 달라"고 했으니.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다"라는 말만 없었을 뿐이다. 세계일보는 청와대와 내각, 공기업 출신의 새누리당 친박계 인사들이 앞다투어 20대 총선 출마를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상당수가 격전지가 아닌 '공천=당선'을 의미하는 텃밭을 노리면서 당 안팎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수도권이나 비영남권에서는 경쟁력이 없으니 안전한 영남 또는 강남에 나가겠다, 이 말 아닌가.

당내 계파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한 전문가 의견이 주목된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현재 친박계의 움직임은) 전통적으로 행정경험을 가진 인사들을 당이 요청해 적전지에 전략공천해 승리에 기여하는 패턴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대부분 텃밭에 출마해 의석 수 확대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데다 현역과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 ■ 뉴스의 재구성

11월 10일. 진실한 사람을 다음 총선에서 뽑아달라고 역설하는 박근혜 대통령.

이 말씀은, 국정 교과서 추진에 미적대고, 심지어 뒤에서는 '교과서 국정화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다'라는 식의 탄소리를 한 것으로 알려진 황우여 부총리를 겨냥한 것은 아닌지? 진실하지 못한 사람, 황우여 부총리는, 11월 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에게 수모를 당하는데.

그렇다면 곧 그만둔다고 하면서 사표를 낸, 그래놓고는 11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혹시 진실한 사람은 정종섭 장관? 진실한 사람이라고 이미 인증받았던지, 사퇴 기자회견 다음날인, 11월 9일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에게 노골적으로, 대충대충 답변하는데.

## [한국일보] 기업에 손 벌리는 청년희망펀드

정부 및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청년희망펀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기업에 기부액 규모와 참여 시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금 액수는 5대 그룹에 750억 원, 금융권에 500억 원이 할당됐고 개별 기업들과의 연

락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맡았다. 전경련은 기부금 할당을 부인했지만 여러 기업들이 전경련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안한 청년희망펀드가 기업들에게 강제할당 하다시피 한 기부금으로 조성돼 문제가 되고 있다. 펀드 출범 초기엔 사회 지도층, 공직자, 일반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기금을 마련한다는 취지였지만 기대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준조세'식 성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모 그룹 임원은 "연봉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이어서 삭감이나 마찬가지"라며 "결코 기꺼운 마음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내부 반발이 커지자 기업은 수당과 보너스 형식으로 임원들의 기부 공제액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개인 재산이 아닌 기업 운영에 쓰여야 할 돈이 펀드에 투입되는 셈이다. 이걸 또 정부 돈이나, 아니다. 기업 돈이다. 기업들은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해 기부 할당제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정부 인허가 사업이 걸려 있거나 그룹 오너와 전 현직 임원들이 재판 및 검찰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민과 진단 없이 눈에 보이는 기금 조성으로만 흐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 [세계일보] [단독] 서울·경기 혁신학교 구입도서 조사 논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여야가 '역사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실이 최근 서울·경기지역 혁신학교를 대상으로 구입 도서목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교과서 국정화를 앞두고 학교 도서관 서적과 교실에 비치된 학습문고에까지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현재 한 의원실은 교사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제출 요구를 철회한 상태다. 교사들에 따르면 지난달 새누리당 소속 송재형 서울시의원도 서울 소재 학교들의 1년간 구입도서 목록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일보 기사였다.

## [경향신문] [국정화 불복종 확산] '6·25 책임' '주체사상 인용'...정부, 외신기자들에 왜곡 자료

교육부는 지난달 16일 '역사교과서 개발 체제'를 주제로 연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국정화 이유로 분단 상황 등을 거론하며 굳센 답변으로 일관하다 국정교과서 추진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교육부는 닷새 후 외신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달랑 A4 2장짜리 자료를 전송했다. 교육부는 외신기자들에게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사상의 선전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며 2014년 보급본 천재교육, 2011년 보급본 지학사 교과서를 편집해 제공했다. 그러나 두 교과서 모두 주체사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한 외신기자는 "워낙 브리핑 때 교육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못했고, 자료가 뒤늦게 와서 살펴봤는데 주체사상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무슨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됐다"고 말했다. 주장은 했는데 근거는 없는 것이다.

## [한겨레] [사설] 에스케이플래닛의 '빅브라더'식 개인정보 수집

SK텔레콤 자회사인 SK플래닛이 앱 장터인 T스토어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고쳐, 이용자의 사상과 신념, 정치적 견해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용 약관에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은 개인별 맞춤 앱 추천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 그런 정보를 수집해도 좋다는 고객의 동의를 받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하지만 이해하기 어렵다. 회사 쪽이 수집하겠다는 개인정보는 극도로 민감한 것들을 망라하고 있다. 노동조합이나 정당의

가입·탈퇴, 건강·성생활 정보, 유전정보와 범죄경력 자료까지 포함돼 있다. 기껏 앱 추천을 받고 이용자가 그런 개인정보를 흔쾌히 제공할 리 만무하다. 만에 하나 외부에 유출되더라도 한다면 악용될 위험이 매우 큰 내용들이다. 고객이 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아도 티스토어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지만, 이용자 대부분은 약관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일괄 동의를 한다. 그런 이용자들의 속성을 악용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뒤늦게 이를 안 이용자들이 해당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스마트폰에 개인정보가 집약되는 시대다.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서비스 회사에 처벌규정 없는 권고만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받는다"고 보기에 어렵다. 서비스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에 사전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서둘러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보 취득이 쉬운 방향으로만 바꾸려 한다.

## [한국일보] [단독] 정경두 공군총장, 美방산업체 대표와 집무실서 면담 논란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이 미국의 방위산업체인 프렛앤휘트니 사장을 계통대 공군본부 집무실에서 별도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형전투기사업을 놓고 뒷말이 무성한 상황에서 공군의 수장이 특정 외국업체 대표를 공군본부로 불러들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외국의 방위산업체 대표가 계통대의 총장 집무실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군 관계자는 "방위산업체 관계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한국군 총장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상황에서 이 회사가 어떻게 면담 기회를 잡았는지 도통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의 국내 에이전트 대표는 공군 장교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 주변에서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든 진출할 수 있는지를 타진하는 자리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말이 돌았다. 그러면 정정당당히 공개입찰에 응하면 될 일이다. 어디 공참총장을 만나나. 업자가. 또, 어디 업자를 만나주나. 공참총장이.

## [경향신문] MB 댄 '봐주기', 정권 바뀌자 본격화...8년 '효성 수사' 끝은?

효성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8년째 이어지고 있다.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회장은 징역 10년, 조현준 사장은 5년을 구형받았지만 다른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추가 기소와 재판이 예상된다. 효성 총수 일가의 도덕적 해이와 지난 이명박 정부의 '봐주기 수사'가 겹쳐지면서 유례없는 장기 수사가 태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효성 수사는 2008년 시작됐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효성 총수 일가에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흔한 압수수색도 총수 일가에 대해선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2013년 정권이 바뀌자 이번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국제청고발로 효성그룹과 조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조 회장과 조 사장 부자를 기소했다. 검찰이 밝힌 효성 비리는 총 8000억 원에 달했다. 어제 정권에 따라 수사가 고무줄인가. 검찰의 적폐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 [한겨레] 세금혜택 줄면 개인 기부금 줄어든다더니... 세액공제 이후 기부금 되레 늘었다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 방식이 2013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뒤, '세금 혜택이 축소돼 개인 기부금이 줄었다'는 일부의 주장, 중앙일보 주장이 대표적이지. 그런데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변경 뒤 2년 동안 개인 기부금은 되레 증가했다. 바뀐 제도로 고소득 직장인 즉 연소득 7000만 원 이상

이 낸 기부금에 대한 세금 혜택이 줄었지만 기부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이다. 기부금 공제 방식이 변경됐어도 직장인의 91% 즉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는 세금 혜택이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담당자도 “세법 개정만으로 기부가 줄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일부 의원들이 기부금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 [한겨레] 성남시 ‘새집증후군’ 근절책 내놔

경기도 성남시가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해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는 국토부 고시보다 강화된 조치로, 전국 첫 시도라는 게 시 설명이다. 성남시는 공공건축물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오염물질을 흡착해 줄이는 기능성 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한 자체 기준을 건축심의회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이 미약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성남시는 본다. 새집증후군은 새로 지은 집의 실내공기가 오염되어 발생하는 대표적인 현대성 환경질환이다.

## [한국일보] 낭만 있는 대학생활? 신입생부터 학업 매달린다

서울대생들마저도 갈수록 악화하는 청년고용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낭만과 여유로 대학생활을 시작하던 과거와 달리 입학 때부터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학업에 매달리고 있는 현상이 뚜렷해진 것. 서울대 대학생생활문화원이 올해 실시한 ‘신입생 설문조사’ 결과를 10년 전 것과 비교해 보면 이런 분위기는 금세 확인된다. 10년 전 입학한 05학번 2,4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묻는 질문에 1위 응답은 ‘폭 넓은 인간관계(40.3%)’였다. ‘전공공부 및 학업(31.6%)’은 2위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 신입생 3,362명 중 1,3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대학생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중복선택 가능)라는 질문에 1위 ‘학업’(65.4%), 2위 ‘폭 넓은 인간관계’(46.8%)로 그 순위가 바뀌었다. 대학생생활문화원장인 광규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매년 교양수업 때 신입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가치관을 조사하면 8년 전에는 대인관계나 사랑 등 관계 지향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진로나 자기계발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며 “점점 어려워지는 취업 환경으로 앞길에 불투명해지는 현실 속에서 일찌감치 돌파구를 찾으려는 세태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 [한국일보] 황당한 수능 미신 총정리

내일이 수능이다. 황당한 수능 미신 총정리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기사 소개한다. “이미 오래 전부터 수험생의 금기 목록 첫 줄은 미역국이 차지하고 있었다. 죽과 참기름도 절대 먹어서는 안 될 음식에 뒤늦게 포함됐다. 시험에서 미끄러지거나 죽을 쑤지 말길 바라는 조바심은 무언가를 깨거나 떨어뜨리는 ‘재수 없는’ 행동마저 금기시했다. 따라서 달걀도 먹으면 안 되고 식탁에서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떨어뜨리면 치명적이다. 시험을 보다 혹시라도 펜이 떨어지면 “이것은 떨어진 게 아니라 땅에 붙은 것이다”라며 반복적으로 암시를 해야만 맨발을 면할 수 있다. 시험을 앞두고 손발톱을 깎으면 안 되고 머릿속에 저장된 공부 가 다 씻겨나가길 바라지 않는다면 시험 당일 머리를 감아서도 안 된다. 횡단보도의 까만 부분을 밟으면 대학에 떨어지고 무심코 빵점을 부르는 빵을 먹었다면 더더욱 큰일이다.

1970년대 경북궁 근정전의 문관(좌청룡) 품계석을 갈아 먹으면 대학에 합격한다는 속설이 퍼지면서 행동에 나선 학부모들이 좌우를 혼동하는 바람에 무관(우백호) 품계석의 훼손이 더 심해졌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도 있다. “서울우유 먹으면 서울대, 연

세우유 먹으면 연세대, 건국우유 먹으면 건국대 간다.” 어이없는 농담 같지만 운명을 알 수 없으니 아예 무시할 수도 없다. 한때 승용차 쏘나타(SONATA)의 ‘S’를 떼어내 간직하면 ‘S대(서울대)’에 합격한다는 속설 때문에 거리에 ‘오나타(ONATA) 승용차가 늘기도 했다. 그 후 “S를 10개 떼야 서울대 합격한다”는 식으로 수위가 높아지기도 했는데, 결국 ‘S대’ 대신 ‘삼수’의 저주에 빠진 수험생이 많았다는 슬픈 이야기도 전해진다. 여학생의 방식을 훔치거나 공부 잘하는 친구의 머리카락을 잘라 보관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그 친구의 침을 받아먹으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믿음이 수험생들 사이에서 떠돌기도 했다.”

## ■ 오늘의 날씨

예비소집일인 오늘, 광주, 군산, 천안, 수원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다. 오늘 낮 동안에도 안개와 먼지가 영긴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고, 안개와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해안과 제주도는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겠는데, 내일까지 영동 지역에는 최고 40mm, 경북 동해안에는 5~20mm, 제주도는 오늘날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된다. 오늘 낮 동안 비교적 따뜻하겠다. 서울 16도, 대구 18도, 광주도 18도까지 오르겠다.

## ■ 오늘의 칼럼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중앙일보 이하경 논설주간의 “‘강남스타일’이 최몽룡 교수 잔혹사 막는다”는 제목의 칼럼 소개하며 마무리하겠다.

“국정 역사 교과서 대표집필자인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 잔혹사를 지켜보면서 보들레르의 시 ‘알바트로스’가 떠올랐다. 가장 멀리, 오래 나는 창공의 왕자 알바트로스는 선상(船上)의 포로가 되는 순간 조롱거리로 전락한다.

고대 그리스 예술가는 신전을 건축할 때 직선 부위를 곡선으로 처리했다. 가능하지 않은 무오류(無誤謬)를 전제로 나만 옳다면 서 상대를 제압하려는 교과서 전쟁의 주역들과는 다르다.

21세기 한국을 제대로 알린 한류, 그중에서도 가수 사이의 ‘강남스타일’로 상징되는 K팝을 생각해 보자. K팝은 한국의 음악인 가. 정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이다. 문화적 국가주의(cultural nationalism)의 경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인데, 이게 글로벌 경쟁력의 원천인 문화적 혼종성이다.

자주·평화·민주를 3대 원칙으로 한 한민족공동체통일안은 노태우 정부가 1989년에 만들었다. 당시 노 대통령은 이흥구 통일원 장관에게 “야당의 세 총재 즉 김영삼·김대중·김종필 얘기를 듣고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전화 한 통화면 아무 때고 만날 정도로 세 사람과 긴밀하게 소통한 끝에 한국 최초의 통일방안을 만들었다.

합의안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살아온 과정이 달랐던 노 대통령과 3김의 생각이 충분히 반영됐고, 저마다 자신의 저작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영삼·김대중 정부에서도 그대로 승계됐고 지금도 유효한 통일방안으로 남아 있다. 내 것만을 고집하지 않고 서로의 가치와 철학이 뒤섞이는 혼종성은 이렇게 생산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태우식으로 접근해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자”는 과제는 던지되 “여야 지도자와 국민이 합의한 방식을 따르겠다”고 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노태우’나 ‘강남스타일’의 혼종성을 수용하면 적어도 최몽룡 잔혹사의 반복은 막을 수 있다.”

[월~금 오후 6시대에 ‘김용민의 석간브리핑’에서 만나요]